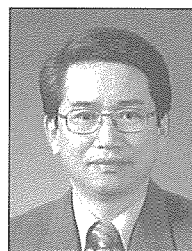


# 개방화 시대 영농조직의 문제점과 재편방향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 농업은 오래 동안 가족농(농가)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개별농가의 협업에 바탕을 둔 영농조직이 새로운 농업경영의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농업법인 제도가 발족됨으로써 농업경영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융자사업이 크게 확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영농조직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조직을 설립하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시설 확충에 치중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부실경영으로 쇠락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연유로 일각에서는 영농조직이나 농업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다.

다행히 최근 들어 영농조직이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개별농가의 협업을 토대로 생산·판매의 규모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원료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기업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 수십 억대의 매출을 올

리는 농업법인의 성공사례가 소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이 글에서는 영농조직의 성격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 영농조직의 유형과 협업화 · 법인화의 유리성

영농조직이란 “복수(2호 이상)의 농가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공동화하기로 하여 결합한 집단 및 농업경영이나 농작업을 조직적으로 맡아서 하는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영농조직은 농업경영 활동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면 본래의 ‘농업생산조직’과 이를 확장한 ‘농산물판매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개인과 조직체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개별경영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완형 조직’과 개별경영을 통합한 새로운 경영체인 ‘통합형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영농조직은 초보적인 노동력 공동이용의 형태로부터 품목별 생산단지 조성, 농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 집단재배 또는 공동경영 등의 단계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체 확립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조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농

업의 생산과정에 한정된다. 그러나 농업경영은 단지 생산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제반 활동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농조직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 조직과 판매조직을 포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농조직이 결성되는 경제적인 배경은 다름 아닌 협업화의 유리성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경영의 전문화 혹은 다각화를 통한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개별농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하여 규모 경제성을 실현하고,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 이익을 향유하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장차 농기업(agri-business)으로 발전 가능한 농업경영의 형태라는 점이다.** 개별농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사업 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별농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를 연계한 농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참여농가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농의소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지속성 있는 농업경영체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농은 가족내의 후계자 단절로 당대의 농업경영이 소멸되지만, 협업농은 조합원이나 사원 등의 신규 참여가 가능하므로 농업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협업경영체를 농업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화의 유리성을 향유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법인격을 획득함으로써 개인과는 다른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경영 내부의 업무에 이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 세제, 사회보험제도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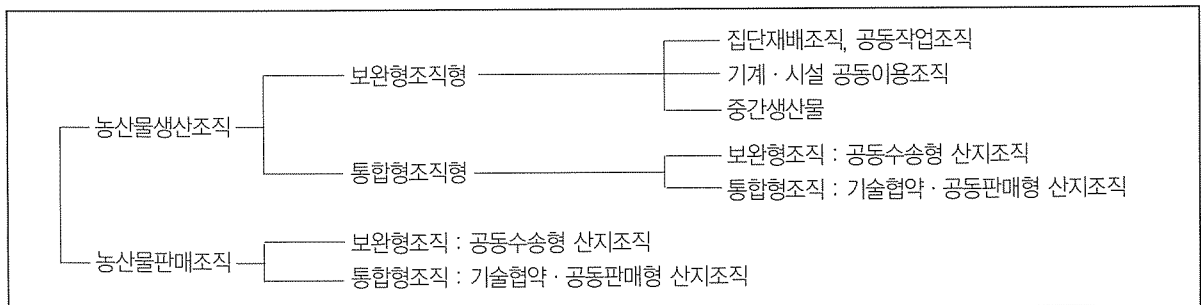
**둘째, 경영상의 유리성으로 법인경영의 인적 결합체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즉, 법인화를 통하여 자본이 결합되어 자본 조달 능력이 증대되며, 또한 경영관리 능력이 결합되어 경영자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법인화에 의하여 구성원의 참여 조건이 정비됨으로써 다양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농업경영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의식 개혁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직업 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금융면이나 시장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한국형 농업법인”으로 경영체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어떠한 실정인가? 통계청이 조사한 2004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

### 〈 영농조직의 유형 〉



조사] 결과를 통해 농업법인의 실태를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2004년 12월말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5,492개소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이 4,425개소이고 농업회사법인이 1,067개소이었다. 법인당 출자자 수는 평균 19.7명(영농조합법인 22.3명, 농업회사법인 7.6명)인데, 출자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업체는 2,828개소(영농조합법인 2,337개소, 농업회사법인 491개소)로서, 나머지는 대표자 단독 운영(702개소)이나 출자자 개별운영(1,962개소)하는 개인기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법인의 경영 상황을 보면, 종사자 수는 총 29,103명(사업체당 8.2명)이며, 그 중 상근종사자는 19,709명(67.7%)이고,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9,394명(32.3%)이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상근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2,028개(57.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17개(0.5%)에 불과하였다.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1,390개소(전체의 39.4%)이고, 법인당 경지면적은 영농조합법인이 9.4ha, 농업회사법인이 17.9ha이었다. 2004년도 총 판매액은 3조 4773억원(법인당 985백만원)으로, 사업별 구성을 보면 농업생산부문이 34.6%이고, 다음으로 농축산물가공업 29.1%, 농축산물유통업 23.4%, 농업서비스업 3.3%, 기타 사업수입 9.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협업체화·법인화의 유리성을 추구하는 농업생산조직이라기보다는 농산물 가공·유통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협업체영을 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또, 1995년부터 비농민의 출자를 허용하고 경영 참여의 폭도 늘렸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정책 당국이나 현장의 농업인 모두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업법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규모화를 위한 협업체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경영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기업적인 경영마인드를 농업에 접목시키고 농업경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라는 경제적 유리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농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농업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을 과거와 같은 협업체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경영형태와 사업유형별로 차등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지원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한 등록 말소를 장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설 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폐지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액의 정책 사업자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경영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농업에서 협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이다.** 농업법인과 협동조합과의 경합은 가공 또는 구판매 등 유통사업에서 나타나며, 단위조합보다는 전문조합에서 직접적인 사업영역의 경쟁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가공·유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영농조

〈 농가와 협업경영의 특성 비교 〉

구 분	농 가	협업경영	
		임 의 조 직 체	법 인 경 영 체
경영체 성격	단독 자연인	복수 자연인	복수출자자의 법인
사업 계속성	사망으로 종결	구성원의 해체로 소멸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책임 형태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 또는 유한책임
자금 조달	개인의 투자	구성원의 투자	구성원 출자, 차입금 등
토지 조달	상속, 구입, 차입	구성원의 제공	출자, 구입, 차입
의사 결정	경영주 단독	구성원의 합의	구성원, 사원의 합의
소유자 사망	상속 또는 파산	생존하는 구성원에 매각	지분은 유산, 상속으로 보전

직은 전문협동조합에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역농협과 농업법인이 상생하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분야의 선배인 농협이 후배인 농업법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는 경영혁신을 위한 농업법인의 자구 노력이다. 먼저,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협업화 및 법인화의 유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법인은 본래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의 농업은 과거와 같은 일차적인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 → 가공 → 판매 → 서비스'라는 일관경영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농업인(생산자)을 출자자로 확보하면서 구성원들이 가진 노동력, 자본, 기술, 경영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사업 확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분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농을 보완하는 영농조직으로 발전해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구조개선 시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에 있으며, 그 축의 하나는 전업농 육성이고 다른 한 축

은 조직체 육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농조직은 개별농가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규모 경제(scale economy)와 범위 경제(scope economy)를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의 만성적인 영세소농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개별 농가의 경영 형태는 전문화 또는 단일화의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농업 단위로 다수의 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주산지 형성을 통하여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지의 조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체가 성숙되면서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들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견되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지방농정 기구들이 지역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토지 등 자원 이용, 재정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구 및 기술경영지도, 가공·저장·운송 등 수확 후처리, 유통·시장판매 등의 업무를 통합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농업 생산만으로는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저장·가공·유통을 연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의 창출은 미래 농업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가족농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개별농가의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날 영농조직은 작목반 형태의 임의조직에서

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기업조직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농업의 중요한 경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족농과는 차별화된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도 영농조직을 결성하는 단계부터 법인경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새로운 경영체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협업화·법인화의 유리성을 추구함으로써 건실한 경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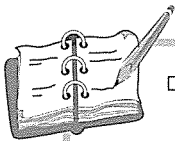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0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067-01-224657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